

경제민주화와 사회통합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매달리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오래 전부터 좌파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던 내용과 유사하다. 기업 집단의 내부거래를 재벌총수 일가의 거래기회 독점을 통한 사익편취 행위로 규정하여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내부거래가 이유 있는 정당한 거래라는 것은 기업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부거래 부당성의 기준을 시장의 경쟁제한 여부가 아닌 경제력 집중에 둬으로써 내부거래를 하는 모든 기업들이 그로 인해 잠재적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리스크를 부담하게 하였다. 좌파 성향의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등이 보수정부인 박근혜정부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제민주화의 대표적인 명분은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있다.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억제 하면 탐욕과 약육강식의 시장에 의해 추동되는 경제가 아니라 공정하고 민주적인 질서에 의해 경제가 운영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과 경제에 대한 이런 인식은 어떤 논의와 주장에 근거할까? ‘한 사람의 이득이 다른 사람의 손해이고, 어느 누구도 타인의 손실에 의거하지 않고는 이윤을 얻을 수 없다’면 시장은 불공정하고 강자만이 승리하는 약탈의 장이 된다. 이 경우 시장의 불공정성과 약탈성을 시정하지 않으면 사회 구성원 간에는 불신과 갈등만이 남게 되고 자발적이고 자연적인 조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즉, 경제민주화가 없으면 사회통합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원시적인 수렵채집사회에서는 한정된 사냥감을 획득하기 위해 사람들 간의 경쟁은 무자비한 생물학적 경쟁이 된다. 생계수단인 사냥감의 자연적 희소성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한 투쟁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라져야 할 적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공급이 한정된 생존조건 하에서 생물학적인 경쟁은 약탈적이며 갈등을 야기한다. ‘한 사람의 이득이 다른 사람의 손해’이고 강자만이 승리하는 약탈의 장은 원시사회와 같이 공급이 한정된 사회에서 나타난다. 이런 이해관계의 자연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분업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이다. 분업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의 공급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분업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나타난다. 생산자들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낮은 가격에 보다 좋은 품질의 재화를 시장에 공급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생산자들은 자신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특화를 하게 되어 시장에서의 매개를 통해 자발적으로 분업을 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을 통해 혁신과 생산성의 향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경쟁은 약탈적인 생물학적 경쟁이 아니다. 시장에서의 경쟁은 오히려 분업과 거래를 통해 자발적인 사회적 협조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 조화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기제이다.

경제민주화의 논리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약탈적인 생물학적 경쟁이라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시장에서의 교환이 거래가 아닌 약탈이라면 시장에서의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모두 이득이 되지 않으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 폭력과 강압에 의한 거래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아니라 탈취이고 약탈이다. 경제민주화의 논리는 시장에서의 거래와 경쟁을 탈취와 약탈, 그리고 약탈적인 생물학적 경쟁과 동일시하고 있다. 또한 경제민주화의 논리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수요가 궁극적으로 모든 생산 활동을 지휘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생산자는 그렇지 못한 생산자에 비해 경쟁력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생산자, 기업은 더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혁신을 거듭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자유로운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과 생산자들의 성장이 촉진되고 혁신이 지속됨으로써 경제가 성장하고 새로운 종류의 시장과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된다.

경제민주화는 이런 기업과 생산자들을 처벌하고 제약하자는 것이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성장한 기업이 소비자의 미래 수요를 예측하여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논리에 따르면 억제되어야 할 행위이다. 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분야 진출을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명분으로 제약한다면 남는 것은 정부에 의해 구획된 한정된 파이뿐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과 생산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혁신적 경쟁이 아닌 정해진 파이를 더 많이 얻기 위한 경쟁이 더 중요해진다. 이런 경쟁은 다시 약탈적인 생물학적 경쟁으로 귀결되고 사회적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다.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항상 존재한다. 이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극복하는 방법은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와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거래와 경쟁을 통해 분업이 촉진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며 자발적인 사회적 협조가 이루어진다. 소비자 수요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는 경쟁과 혁신, 이를 통한 성장을 제약하는 것은 자발적인 사회적 협조, 즉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든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명분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는 이런 역할을 통해 오히려 사회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경제민주화는 결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없다.